

총무처

국무총리지시 제 10 호

(720-2064)

1991. 6. 19

수신 수신처 참조

참조 법무담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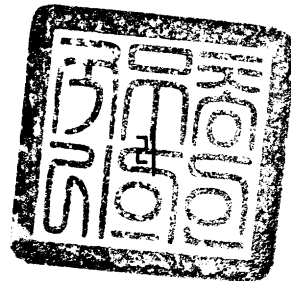
제목 훈령.예규 등의 일제정비작업 추진지시

1. 각급 행정기관에서는 소관법령의 시행 또는 업무수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훈령.예규.지침 등을 발령.운영함으로써 업무처리에 기여하고 있으나, 시간이 흐르고 행정여건이 바뀔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에도 이의 정비가 소홀하여 행정의 혼란은 물론 민원인에게도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정부에서는 대민행정의 편의를 적극 도모하는 한편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훈령.예규.지침 등의 일제정비작업을 추진코자 하니, 각급기관의 장은 별첨 "훈령.예규 등의 일제정비지침"에 의거 '91. 8.31까지 소관 훈령등에 대한 정비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그 결과를 총무처장관을 통하여 보고하기 바랍니다.

첨부 : 훈령.예규 등의 일제정비 지침 1부. 끝.

국무총



수신처 : 가(10-57), 나, 다

훈령·예규 등의 일제 정비지침

I. 정비목적

- 각급 행정기관에서 소관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발령한 훈령·예규·지침 등의 내용은 일반법령에 못지않게 국민생활에 직·간접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훈령·예규 등은 사회변화와 행정여건의 변화에 발맞추어 수시로 개선·정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의 미흡으로 훈령·예규 등의 효력여부가 불분명하고 그 내용이 상호모순되는 경우가 있어 대민행정의 불편을 초래함과 동시에 행정능률의 저하를 야기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현행 각종 훈령·예규 등을 일제정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II. 정비대상

- '91. 6. 1 현재, 각급 행정기관 소관의 훈령·예규 및
- '91. 6. 1 현재, 각급 행정기관 소관의 지침·지시 중 훈령·예규적 성질을 가진 것

Ⅲ. 정비기준

1. 폐지

- 훈령 등의 근거법령 자체가 폐지 또는 실효된 경우 (1-1)
- 훈령 등의 발령 당시 행정여건과 현재의 여건이 현격히 변화하여 등 규정들을 적용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1-2)
- 훈령 등의 발령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이상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경우 (1-3)
- 훈령 등의 효력의 종기가 도래하여 앞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 (1-4)
- 훈령 등의 규정내용이 상위법규와 저촉되거나 중복되는 경우 (1-5)
- 훈령 등을 발령한 이후 실제 적용실적이 없는 경우 (1-6)
- 조건의 성취 등 기타 원인에 의하여 훈령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1-7)

2. 통·폐합

- 동일사항에 대하여 2개이상의 훈령 등이 발령된 경우 (2-1)
- 훈령 등의 규정내용이 새로운 훈령 등과 중복되는 경우 (2-2)
-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지침·지시 등은 1개의 훈령 또는 예규화 조치 (2-3)

3. 개 정

-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훈령 등의 내용이 현실타당성을 잃게 된 경우
현실에 맞춰 개선조치 (3-1)
-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훈령 등의 내용에 개정이 필요한 경우 (3-2)
- 법령으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 훈령 등의 내용에 있는 경우, 이를 직접
관계법령에 격상 반영조치하고, 훈령 등의 내용에서는 삭제 (3-3)
- 훈령 등의 내용이 국민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에 제약요인이
되는 경우 등 규제를 완화조치 (3-4)
- 기타 훈령 등의 내용이 복잡한 절차 또는 조건 등을 담고 있어 현실적으로
이행이 곤란한 경우 개선조치 등 (3-5)

N. 행정사항

- 소관훈령 등의 정비작업을 '91.8.31까지 추진완료하고 그 결과를
별첨 <서식1,2>에 의거 작성하여 총무처로 통보할 것.
- 총무처는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독려하고 각 부처별 정비결과를 취합하여
국무총리께 보고할 것.
- 각 부처는 소관훈령 등의 정비작업이 완료되면 동 훈령 등을 수록한 훈령.
예규집을 추록가제식으로 발간하여 배포함으로써 민원인 및 일선공무원 등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훈령·예규집의 발간형식 등에 대하여는
국무총리훈령 제197호, "훈령·예규집발간및훈령·예규의효율적인관리에관한
특별지시" 참조)
- 각 부처에서 폐지한 훈령 등은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 행정상의 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할 것.

※ 별첨

< 서 식 1 >

총괄표

○○부

단위 : 건

구분	정비작업전	정비작업후	정비실적			
			소계	폐지	통·폐합	개정
계						
훈령						
예규						
지침						

< 서 식 2 >

(훈령.예규.지침) 정비내역서

구 분	정 비 유 형	발령번호	발 령 년 월 일	건 명	정 비 년 월 일	정 비 사 유
훈 령	폐 지	○ 호				1-1
	통 · 폐 합				
	개 정				

※ 작성요령

1. 훈령.예규.지침 등을 각각 별개의 목록으로 작성
2. 사유란은 Ⅲ. 정비기준 중 해당코드를 기재
3. 통.폐합의 경우에는 조치결과 통합된 훈령 등을 기재하되 괄호안에 흡수된 훈령 등을 기재함

訓令.例規등의 一齊 整備作業 推進計劃

1. 整備目的

- 各級 行政機關의 訓令.例規등이 行政與件變化에 의해 效力與否가 不分明하고, 內容이 相互矛盾되는 境遇가 있어
- 國民生活의 便益과 行政의 效率性を 圖謀하고자
各種 訓令.例規등을 一齊 整備하고자 함.

<訓令.例規등 現況>

計	訓 令	例 規	指 針
7,189件	3,751	2,826	1,412

2. 整備基準

- 廢 止 ※
 - 訓令등의 根據法令 自體가 廢止 또는 效된 境遇등
- 統.廢合
 - 同一 事項에 대하여 2個 以上の 訓令등이 發令된 境遇등
- 改 正
 - 行政環境의 變化에 따라 現實 妥當性を 잃게 된 境遇등

3. 向後措置計劃

- 各部處는 8.31까지 所管訓令등의 整備作業 推進을 完了하고,
總務處는 各部處 整備結果를 취합하여 總理께 報告

4. 建 議

社會變化에 副應하여 國民生活의 便益을 增進하고
行政의 效率性を 增進하기 위한 것이므로 原案대로 裁可하여
주실 것을 建議드립니다.

총 관 표

'91. 6. 1 현재

구 분	계	훈 령	예 규	지 침
총 계 (70개 기 관)	7,189 (100%)	3,751 (52%)	2,026 (28%)	1,412 (20%)
중앙행정기관 (40개 기 관)	4,671 (65%)	2,400	1,157	1,114
시 · 도 (15개 기 관)	2,198 (31%)	1,168	830	200
시 · 도 교육청 (15개 기 관)	320 (4%)	183	39	98

중 앙 행 정 기 관

기 관 명	개	훈 령	에 규	지 침
총 계	4,671	2,400	1,157	1,114
경제기획원	35	33	2	.
통 일 원	31	30	1	.
총 무 처	73	26	46	1
과 학 기 술 처	73	48	22	3
원 경 처	82	21	37	24
공 보 처	16	14	2	.
법 제 처	20	18	2	.
국 가 보 훈 처	58	42	4	12
외 무 부	85	35	43	7
내 무 부	317	164	153	.
재 무 부	161	25	89	47
법 무 부	235	74	70	91
국 방 부	239	91	37	111
교 육 부	104	54	28	22
문 화 부	18	18	.	.
체 육 청 소 년 부	17	14	2	1
농 립 수 산 부	145	107	11	27
상 공 부	24	19	5	.
동 력 자 원 부	17	16	1	.
건 설 부	151	118	2	31
보 건 사 회 부	305	88	62	155

기 관 명	계	훈 령	예 규	지 침
노 동 부	146	82	64	.
교 통 부	171	129	17	25
체 신 부	89	89	0	0
조 달 청	83	75	0	8
통 계 청	3	2	1	.
기 상 청	42	30	0	12
국 세 청	101	101	0	0
관 세 청	266	69	197	.
대 검 찰 청	563	19	107	437
병 무 청	87	57	28	2
농 촌 진 흥 청	30	55	7	4
신 림 청	107	64	33	10
수 산 청	73	51	5	17
공 업 진 흥 청	66	30	.	.
특 허 청	37	35	2	.
철 도 청	402	370	32	
해 운 항 만 청	166	83	17	66
문 화 제 관 리 국	12	0	12	0
수 로 국	21	4	16	1

시 · 도

기 관 명	계	훈 령	예 규	지 침
총 계	2,198	1,168	830	200
서울특별시	194	98	71	25
부산직할시	150	85	64	1
대구직할시	154	57	28	69
인천직할시	129	59	47	23
광주직할시	129	82	47	0
대전직할시	92	88	4	.
경 기 도	186	80	87	19
강 원 도	195	95	100	0
충 청 북 도	126	63	63	
충 청 남 도	113	75	37	1
전 라 북 도	125	84	16	25
전 라 남 도	243	104	104	35
경 상 북 도	112	78	34	.
경 상 남 도	101	52	49	0
제 주 도	149	68	79	2

시 · 도 교육청

기 관 명	계	훈 령	예 규	지 침
총 개	320	183	39	98
서울특별시교육청	19	11	0	8
부산직할시교육청	17	17	.	.
대구직할시교육청	19	14	2	3
인천직할시교육청	16	11	0	5
광주직할시교육청	10	7	2	1
대전직할시교육청	17	17	0	0
경기도 교육청	20	13	.	7
강원도 교육청	39	16	16	.
충청북도 교육청	23	23	.	7
충청남도 교육청	13	8	0	5
전라북도 교육청	45	11	2	32
전라남도 교육청	43	9	9	25
경상북도 교육청	7	7	.	.
경상남도 교육청	12	4	3	5
제주도 교육청	20	15	5	.

담당조장관	실 장	재가문서요약전	수석비서관	실 장
3				
국 무 총 리 실		대 통 령 비 서 실		

훈령.예규.지침 등의 일제정비

(정비목적)

- 법령에 못지않게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각급 행정기관의 훈령.예규.지침 등을 일제정비, 대민행정의 혼선방지 및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함.

* 총 7,189건의 훈령.예규 등 대상

(정비기준)

- 폐 지
 - 훈령 등의 근거법령 자체가 폐지 또는 실효된 경우 등
- 통.폐합
 - 동일사항에 대하여 2개이상의 훈령 등이 발령된 경우 등
- 개 정
 - 행정여건변화에 따라 현실타당성이 상실된 경우 등

* '91. 8. 31까지 일제정비 후 정비결과 보고

상 취급	
국 무 총 리	
문 서 통 제	
발 송 인	

무수행상의 필요에 의
기여하고 있으나, 시
거나 계속 존치할 필요
은 물론 민원인에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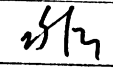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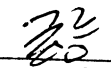


2. 따라서 정부에서는 대민행정의 편의를 적극 도모하는 한편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훈령.예규.지침 등의 일제정비작업을 추진
코자 하니, 각급기관의 장은 별첨 "훈령.예규 등의 일제정비지침"에 의거 '91.
8.31까지 소관 훈령등에 대한 정비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그 결과를 총무처장관
을 통하여 보고하기 바랍니다.

1505-25(2-1)일(1)갑
1985. 9. 9 승인

190mmx268mm 인쇄용지 2급 60g/m²
정 직 질 서 창 조

기안용지

(전화번호: 720-2064)

분류번호 문서번호		국무총리지시 제 호		시행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 준영구 10. 5. 3. 1		장 관		국 무 총 리	
수신처 보존기간							
시행일자		1991. 6.					
보조 기관	차 관			협 조 기 관	기획관리실장 		문서통제
	부 장						
	담당관						
기안책임자		박수영 				발 송 인	
경 유					발 신 명 의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법무담당관						
제 목	훈령.예규 등의 일제정비작업 추진지시						
<p>1. 각급 행정기관에서는 소관법령의 시행 또는 업무수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훈령.예규.지침 등을 발령.운영함으로써 업무처리에 기여하고 있으나, 시간이 흐르고 행정여건이 바뀔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에도 이의 정비가 소홀하여 행정의 혼란은 물론 민원인에게도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p>							
<p>2. 따라서 정부에서는 대민행정의 편의를 적극 도모하는 한편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훈령.예규.지침 등의 일제정비작업을 추진코자 하니, 각급기관의 장은 별첨 "훈령.예규 등의 일제정비지침"에 의거 '91. 8. 31까지 소관 훈령등에 대한 정비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그 결과를 총무처장관을 통하여 보고하기 바랍니다.</p>							

1505-25(2-1)일(1)갑
1985. 9. 9 승인

190mmx268mm 인쇄용지 2급 60g/m²
정 직 질 서 창 조

첨부 : 훈령.예규 등의 일제 정비 지침 1부. 끝.

수신처 : 가(10-57), 나, 다

1505-25(2-1)일(1)을
1985. 9. 9 인

190mmx268mm 인쇄용지 2급 60g/m²
정직 질서 창조

훈령·예규 등의 일제 정비지침

I. 정비목적

- 각급 행정기관에서 소관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발령한 훈령·예규·지침 등의 내용은 일반법령에 못지않게 국민생활에 직·간접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훈령·예규 등은 사회변화와 행정여건의 변화에 발맞추어 수시로 개선·정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의 미흡으로 훈령·예규 등의 효력여부가 불분명하고 그 내용이 상호모순되는 경우가 있어 대민행정의 불편을 초래함과 동시에 행정능률의 저하를 야기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현행 각종 훈령·예규 등을 일제정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II. 정비대상

- '91. 6. 1 현재, 각급 행정기관 소관의 훈령·예규 및
- '91. 6. 1 현재, 각급 행정기관 소관의 지침·지시 중 훈령·예규적 성질을 가진 것

Ⅲ. 정비기준

1. 폐지

- 훈령 등의 근거법령 자체가 폐지 또는 실효된 경우 (1-1)
- 훈령 등의 발령 당시 행정여건과 현재의 여건이 현격히 변화하여 동 규정들을 적용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1-2)
- 훈령 등의 발령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경우 (1-3)
- 훈령 등의 효력의 종기가 도래하여 앞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 (1-4)
- 훈령 등의 규정내용이 상위법규와 저촉되거나 중복되는 경우 (1-5)
- 훈령 등을 발령한 이후 실제 적용실적이 없는 경우 (1-6)
- 조건의 성취 등 기타 원인에 의하여 훈령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1-7)

2. 통·폐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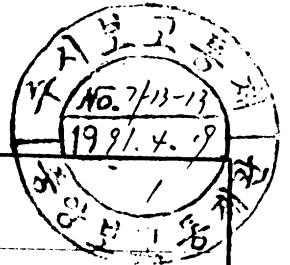
- 동일사항에 대하여 2개 이상의 훈령 등이 발령된 경우 (2-1)
- 훈령 등의 규정내용이 새로운 훈령 등과 중복되는 경우 (2-2)
-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지침·지시 등은 1개의 훈령 또는 예규화 조치 (2-3)

3. 개 정

-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훈령 등의 내용이 현실타당성을 잃게 된 경우
현실에 맞춰 개선조치 (3-1)
-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훈령 등의 내용에 개정이 필요한 경우 (3-2)
- 법령으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 훈령 등의 내용에 있는 경우, 이를 직접
관계법령에 격상 반영조치하고, 훈령 등의 내용에서는 삭제 (3-3)
- 훈령 등의 내용이 국민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에 제약요인이
되는 경우 동 규제를 완화조치 (3-4)
- 기타 훈령 등의 내용이 복잡한 절차 또는 조건 등을 담고 있어 현실적으로
이행이 곤란한 경우 개선조치 등 (3-5)

Ⅳ. 행정사항

- 소관훈령 등의 정비작업을 '91.8.31까지 추진완료하고 그 결과를
별첨 <서식1,2>에 의거 작성하여 총무처로 통보할 것
- 총무처는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독려하고 각 부처별 정비결과를 취합하여
국무총리께 보고할 것.
- 각 부처는 소관훈령 등의 정비작업이 완료되면 동 훈령 등을
행정편람형식으로 발간하여 배포함으로써 민원인 및 일선공무원 등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각 부처에서 폐지한 훈령 등은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 행정상의 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할 것



분류번호 문서번호		행조 01280-74		기안용지 (전화번호: 720-2064)		시행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 준영구 10. 5. 3. 1		실장			
수신처 보존기간							
시행일자							
보조 기관	제 1 부 장	배길	협조 기관	제 2 부 장	문서통제		
	총괄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기안책임자		박수영하		발송인			
경유	수신처 참조 법무담당관			발신 명의			
제 목				훈령·예규·지침등의 자료협조 요청			

1. 정부에서는 그동안 대민행정의 편의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인허가제도와 행정제도 개선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사회발전과 행정환경의 변화는 나날히 급속하게 이루어지는데 비하여 정부의 각종 제도와 법령은 미처 이를 수용하지 못한채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특히 각급기관에서 소관법령의 시행 또는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발령·운영하고 있는 각종 훈령·예규·지침등의 일부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여건이 바뀔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일반국민의 불편과 행정능률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의 개선작업을 위하여 정부 각 부처의 훈령·예규·지침등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귀 부(원.처.청) 소관 자료

1505-25(2-1)일(1)갑
1985. 9. 9 승인

190mmx268mm 인쇄용지 2급 60g/m²
정직 질서 창조

행조 01280 -

둘 협조 요청하오니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

5.4 한)

첨 부 : 작성서식 1부. 끝.

수신처: 가(10-57), 나(01-18), 다(01-18)

1505-25(2-1)일(1)을
1985. 9. 9 인

190mm×268mm 인쇄용지 2급 60g/m²
정직 질서 창조

(별 첨 1)

작 성 서 식

1. 총괄표

< 0 0 부 >

'91. 3. 31. 현재

계	훈 령	예 규	지침 및 지시

※ 작성요령

○ 소관 훈령, 예규, 지침 및 지시의 총 건수를 기재 ('91.3.31현재 기준)

2. 훈령 목록

< 0 0 부 >

'91. 3. 31. 현재

연 번	발령번호	발령연월일	건 명	비 고

※ 작성요령

- 연 번 : 소관훈령의 일련번호를 기재함(발령번호순으로 기재)
- 발령번호 및 발령연월일 : 제정시 발령번호를 기재하되 전문 개정되거나 건명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경우의 발령번호를 기재함
- 비 고 : 다른 원,부,처,청과의 공동 훈령인 경우에 그 원,부,처,청의 명칭을 기재함

3. 예 규 목 록

< 0 0 부 >

'91. 3. 31. 현재

연 번	발령번호	발령연월일	건 명	비 고

※ 기재요령

○ 훈령의 경우와 동일함

4. 지 침 , 지시목록

< 0 0 부 >

'91. 3. 31. 현재

연 번	발령번호	발령연월일	건 명	비 고

※ 기재요령

○ 훈령의 경우와 동일함

훈령·예규·지침 등의 일제 정비

< 기본방향 >

- 내용이 상치·모순되는 훈령·예규·지침 등을 일제정비하여
일선대민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

○ 각 부처 소관 훈령·예규·지침 등 실태 파악('91.4)

※ '83년 일제정비시 훈령·예규 등 총 4,600건 대상

○ 각종 훈령·예규 등의 정비지침(안) 작성('91.4-5)

- 일제정비 지침(안) 마련, 국무총리지시로 각 부처 시달
 - 시의에 맞지 아니하여 적용타당성이 없는 훈령·예규 등은 폐지
 - 동일사안에 대한 2개 이상의 훈령·예규는 1개로 통·폐합
 - 내용이 상호 모순되는 훈령·예규·지침은 새로이 정비
 -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지시 등은 하나의 예규로 작성, 활용
 - 상위 법령내용과 모순·저촉되는 훈령·예규 등은 폐지
 - 특히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첨부서류 및 부관 등은 폐지

○ 지침에 의한 일제정비 추진('91.6)

○ 정비결과 보고('91.7)

※ 정비된 훈령·예규·지침 등은 이를 편람화하여 민원인 및
관계공무원 활용 조치

訓令·例規 등의 一齊整備作業 推進計劃

整備目的

- 各급 行政機關에서 所管業務의 執行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발령한 訓令·例規·指針 등의 내용은 일반법령에 못지않게 國民生活에 직·간접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訓令·例規 등은 社會變化와 行政與件의 變化에 발맞추어 수시로 改善·整備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의 미흡으로 訓令·例規 등의 效力與否가 불분명하고 그 내용이 相互矛盾되는 경우가 있어 對民行政의 不便을 초래함과 동시에 行政能率의 低下를 야기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現행 각종 訓令·例規 등을 一齊整備함으로써 國民生活의 便益과 行政의 效率性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訓令·例規 등 現況

'91.6.1 現在

計	訓 令	例 規	指 針
<u>7,189件</u> (100%)	3,751 (52)	2,026 (28)	1,412 (20)

※ 中央行政機關 4,671件(65%), 市·道 및 市·道教育廳 2,518件(35%)

整備基準

<廢止>

- 訓令 등의 根據法令 자체가 廢止 또는 實效된 경우
 - 독극물영업자등에대한행정처분기준(환경처 예규 제9호, '90.5.17)
 - ※ 근거법령인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폐지('90.8.1)
- 訓令 등의 발령당시 行政與件과 現在의 與件이 현격히 變化하여 동 規定들을 適用할 可能性이 없는 경우
 - 과독광부적립금관리규정(노동부 훈령 제5호, '81.4.15)
- 訓令 등의 發令目的이 이미 達成되어 더 이상 適用할 餘地가 없는 경우
 - 서울시올림픽경비대운영규정(서울시 훈령 제63호, '86.3.6)
- 訓令 등의 效力이 終期가 도래하여 앞으로 존치할 必要가 없는 경우
 - 건군10주년기념기장령(국방부 훈령 제32호, '59.10.1)
- 訓令 등을 發令한 이후 실제적용이 없는 경우
 - 신규채용직원개인지도관운영규정(총무처 훈령 제69호, '78.7.21)
- 條件의 成就 등 기타 원인에 의하여 訓令의 效力이 상실된 경우
 - 서호제방긴급복구대편성규정(농진청 훈령 제254호, '79.7.24)

< 統 一 廢 合 >

- 同一事項에 대하여 2개 이상의訓令 등이發令된 경우
 - 부산시내부위임규정(훈령 제91호, '64.8.5)
 - 부산직할시사무의내부위임규정(훈령 제94호, '88.8.16)
- 訓令 등의規定內容이 새로운訓令 등과重複되는 경우
 - 종합상황실운영규정(서울시 예규 제257호, '73.6.7)
 - 서울특별시종합상황실운영규정(서울시 예규 제597호, '83.8.8)

< 改 正 >

- 行政環境의變化에 따라訓令 등의內容이 현실타당성을 잃게 된 경우
 - 민간인국외여행심사규정(내무부 훈령 제453호, '75.12.26)
- 根據法令의改正으로訓令 등의內容에改正이 필요한 경우
 - 체신부예산집행심의회세칙(체신부 훈령제2643호, 83.3.10)에 예산회계법 개정 미반영
- 法令事項이訓令 등에規定된 경우
 - 자율관리보세구역운영요령(관세청 고시 88-530)상에 규정된 관세사의 등록 및 등록취소 요건

行政事項

- 所管 訓令 등의 整備作業 推進完了 : '91.8.31까지
- 總務處는 各 部處 推進狀況督勵 및 整備結果를 聚合하여 總理께 報告
- 各 部處는 整備完了 後 行政便覽을 發刊. 配布하여 民願人 및
一線公務員 活用 圖謀
- 各 部處에서 廢止한 訓令 등은 政府記錄保存所에 移管하여 행정상의
參考資料로 活用토록 할 것.

초
○ 관 표

'91. 6. 1 현재

구 분	개	훈 령	에 규	지 침
총 개 (70개 기관)	7,189 (100%)	3,751 (52%)	2,026 (28%)	1,412 (20%)
중앙행정기관 (40개 기관)	4,671 (65%)	2,400	1,157	1,114
시 · 도 (15개 기관)	2,198 (31%)	1,168	830	200
시 · 도 교육청 (15개 기관)	320 (4%)	183	39	98

중 앙 행 정 기 관

기 관 명	개	훈 령	에 규	지 침
총 계	4,671	2,400	1,157	1,114
경제기획원	35	33	2	.
통 일 원	31	30	1	.
총 무 처	73	26	46	1
과학기술처	73	48	22	3
환 경 처	82	21	37	24
공 보 처	16	14	2	.
법 제 처	20	18	2	.
국가보훈처	58	42	4	12
외 무 부	85	35	43	7
내 무 부	317	164	153	.
재 무 부	161	25	89	47
법 무 부	235	74	70	91
국 방 부	239	91	37	111
교 육 부	104	54	28	22
문 화 부	18	18	.	.
체육청소년부	17	14	2	1
농림수산부	145	107	11	27
상 공 부	24	19	5	.
동력자원부	17	16	1	.
건 설 부	151	118	2	31
보건사회부	305	88	62	155

기 관 명	계	훈 령	예 규	지 침
노 동 부	146	82	64	.
교 통 부	171	129	17	25
체 신 부	89	89	0	0
조 달 청	83	75	0	8
통 계 청	3	2	1	.
기 상 청	42	30	0	12
국 세 청	101	101	0	0
관 세 청	266	69	197	.
대 검 찰 청	563	19	107	437
병 무 청	87	57	28	2
농 촌 진 흥 청	30	55	7	4
신 림 청	107	64	33	10
수 산 청	73	51	5	17
공 업 진 흥 청	66	30	.	.
특 허 청	37	35	2	.
철 도 청	402	370	32	
해 운 항 만 청	166	83	17	66
문 화 재 관 리 국	12	0	12	0
수 로 국	21	4	16	1

시 · 도

기 관 명	계	훈 령	예 규	지 침
총 계	2,198	1,168	830	200
서울특별시	194	98	71	25
부산직할시	150	85	64	1
대구직할시	154	57	28	69
인천직할시	129	59	47	23
광주직할시	129	82	47	0
대전직할시	92	88	4	.
경 기 도	186	80	87	19
강 원 도	195	95	100	0
충 청 북 도	126	63	63	
충 청 남 도	113	75	37	1
전 라 북 도	125	84	16	25
전 라 남 도	243	104	104	35
경 상 북 도	112	78	34	.
경 상 남 도	101	52	49	0
제 주 도	149	68	79	2

시 · 도 교육청

기 관 명	계	훈 령	예 규	지 침
총 계	320	183	39	98
서울특별시교육청	19	11	0	8
부산직할시교육청	17	17	.	.
대구직할시교육청	19	14	2	3
인천직할시교육청	16	11	0	5
광주직할시교육청	10	7	2	1
대전직할시교육청	17	17	0	0
경기도 교육청	20	13	.	7
강원도 교육청	39	16	16	.
충청북도 교육청	23	23	.	7
충청남도 교육청	13	8	0	5
전라북도 교육청	45	11	2	32
전라남도 교육청	43	9	9	25
경상북도 교육청	7	7	.	.
경상남도 교육청	12	4	3	5
제주도 교육청	20	15	5	.